

-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 우리는 풍요로움과 편리함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을 만나고 위로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말하고,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기본적인 공통분모를 공유해야 한다.
- 정치란 단순히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논의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우리는 이를 '정치적 보수'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우리는 이를 '정치적 진보'라고 부른다.

-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역사상 매우 독특한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체제다.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최선의 체제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현재의 사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 그래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수' 혹은 '우파'라고 한다. 보수는 안정지향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진보' 혹은 '좌파'라고 한다.
- 오늘날 일반적으로 진보라 할 때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후기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다.
-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며,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자본가, 기업이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는 후기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며, 세금을 높임으로써 복지를 향상하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견해는 노동자, 농민, 서민등이 지지한다.
- 정치 { 보수 { 장점: 노동, 투자의욕 증→성장
단점: 빈부격차, 사회갈등 심화
진보 { 장점: 빈부격차 감소, 사회갈등 완화
단점: 노동, 투자의욕 감소→침체

-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

현실에서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현실적인 구분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한국, 미국, 일본의 경우 대략 25%내외의 세율을 유지한다. 수정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대략 40%,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50~60%의 세율을 유지한다.
- 한국사회는 현 시점에서는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대변되는 사회이며, 복지수준이 저조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국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세금과 규제에 걱정이 없으니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환경이 유연해지므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에도 매력적인 조건이 된다. 이런 보수적인 정치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이

다.

- 미디어가 객관적 보도를 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 사실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미디어가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으로 편집하고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 미디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적으로 수익 구조 때문이다. 언론사와 방송사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오직 광고 수익을 통해서이다. 기업들로부터 광고 송출의 대가를 받아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언론사와 방송사는 유지될 수 있다.

사업 유지를 모든 수익이 기업으로부터 나오니, 언론과 방송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 미디어의 수익 구조의 특성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대중은 미디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 미디어는 정보를 얻는 수단을 넘어 준거의 틀로 작용한다.

- 대중은 생각보다 나약하고 무관심해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귀찮아 한다. 미디어는 그 틈으로 파고들어 대중이 봐야 할 곳을 친절하고 세련되게 가르쳐준다.

- 대형 미디어가 수익 없이 유지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대신 운영 규모가 작은 소규모의 미디어는 진보적 성향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언론이다. 다양한 인터넷 언론들은 기존 언론과 방송에 비해 운영 부담이 적다. 비용이 필요한 물리적 매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벌그룹이나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진보적 견해를 유지할 수가 있다.

- 20세기 호르크하이머를 주축으로 결성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대중매체의 오락적 기능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비판이론에 따르면 미디어의 오락적 기능은 대중들에게 사회 체제의 압박을 숨기고 도피하게 기능한다. 미디어의 말초적 가십들이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보수성향의 언론과 방송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기업의 광고를 토대로 미디어가 대중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토대로 복잡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선하고, 소자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중문화의 질적 향상에 미디어와 기업간의 공생구조가 기여했음은 분명하다.

- 자본가와 노동자는 사회에서 가장 대립적이고 첨예한, 화해할 수 없는 경제집단이다.

두 집단은 근원적이고 대립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각 집단에 심리적, 이념적 친근성을 두는 사람들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맹렬히 공격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기도 한다. 보수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 중 일부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이기적인 행동이며 사회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또한 진보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 중 일부는 기업과 사측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익을 독점하며 자본가의 존재 자체가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입장 모두 모두 문제 상황을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 사측과 노조 중 선하거나 도덕성을 담보한 집단은 없다. 노사의 문제는 단순히 누구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 종교는 어떤 종교이건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의 체제를 인정한다. 이러한 면에서 종교는 보수적이다.

종교의 공통된 관심사는 자아에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

법으로써 사회의 변화나 개혁보다는 자기 내면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한다.

이처럼 문제의 원인을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돌리는 사고방식은 그 사회의 문제를 은폐함으로써 대중의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말한 의미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 역시 심리적 안정을 통해 민중이 느끼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불만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교는 치열한 실천적 저항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행위의 가치를 폄하하고, 사후 세계나 내면 세계라는 개인적인 관심사를 부각함으로써, 사회로 향해야 마땅한 정당한 분노를 안으로 삭히도록 한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진보적 성향을 띠는 종교적운동도 존재한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한다. 또한 한국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남미의 가톨릭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해방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의롭지 못한 경제,정치,사회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했다. 또한 이들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신학을 해석하고, 교회가 사회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의 신념은 로마교황청이 마르크스주의와의 연관성을 우려하는 경고 문건을 발표하면서 현재는 위축된 상태다.

- 전통적으로 학생운동은 NL(‘National Liberation’)과 PD(People’s Democratic’)로 구분된다. NL은 반미와 통일을 추구한다. PD는 자본주의 반대, 노동해방을 지향한다.

NL은 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PD는 그것보다는 노동자의 권리나 인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FTA, 무상급식, 민영화 -

보수와 진보를 실제 현실에 적용해보자

- FTA는 관세, 즉 세수에 대한 논쟁이며 궁극적으로 세금을 낮추려는 제도다.세금이 낮아지면 자본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고, 복지가 낮아지면 노동자와 서민에 불이익이 된다. 따라서 FTA에 대해 보수는 찬성하고 진보는 반대한다.

-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 복지가 높아지려면 당연히 세금을 올려야 한다. 따라서 기업과 자본가는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진보는 무상급식을 찬성할 것이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복지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니.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 옹호할 것이다.

- 민영화는 정부가 관리하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개인과 민간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철도,전기,공항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 보수정당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보수 언론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을 중점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자본가와 대기업이 이를 인수하려 하고, 시장이 자유화되는 것에 대해 군과 종교는 지지하는 입장을 가질 것이다.

- 진보정당은 민영화에 반대할 것이다. 진보 언론은 민영화가 가져올 전기,통신,철도,항공,의료 비용의 상승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는 시장 논리를 따라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시될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부담이 커지므로 대대적인 반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노동운동계와 학생 운동 단체가 이 반대를 지지할 것이다.

- 보수/진보에 대한 축구 경기의 비유 -
보수와 진보의 한 판, 당신은 누구를 응원하겠는가

-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어떻게 독재를 탄생시키는가

-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주의와 엘리트주의다.
-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에서 대립되는 개념이다.
- 경제체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의 문제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역시 어느쪽도 완벽할 수 없으며, 둘다 장단점을 가진 불완전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 의사결정 참여수에 따라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대의제)로 나눌 수 있다.
-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이기 때문에 개별 시민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시민의 뜻이 개별적인 사안마다 반영될 수는 없다.
- 민주주의의 본질인 투표는 정치인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갈 내일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한국은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보다는 정당의 특성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
- 선출된 정치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가 그것이다.
- 부자가 되는 세상, 성장하는 경제, 세금 인하를 약속하는 대리인만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다. 경제 성장과 부를 추종하는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반대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두 번째 문제점이 발견된다. ‘다수의 독재’가 그것이다.
-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형식적 측면이 독재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과 동시에 내용적 측면이 보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형식적 다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내용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의 수렴 과정과 절차가 보장되고, 각 구성원이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관용적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 독재, 엘리트주의 -

독재와 엘리트주의는 나쁜 것인가

-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사실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한다. 의사결정의 주체인 다수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어리석음(중우정치)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강력히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민주주의가 소중환 정치체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분명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 불완전한 체제인것도 사실이라는 점이다.
-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스파르타의 엘리트주의를 제시했다.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독재, 귀족제, 과두정치, 전제정치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 엘리트주의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한다. 첫 번째는 사회가 권력을 가진인 엘리트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일반 대중으로 구분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들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개인적, 환경적 잠재성을 가진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할 때,사회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통제되어 최선의 사회 형태를 갖춘다.엘리트주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통치자의 정당성이 시민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데에 있다. 엘리트의 정치적 정당성은 엘리트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 소크라테스는 다양한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신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하나의 진리를 찾으려 했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철학에서는 절대주의로, 정치에서는 엘리트주의로 나타난다.

• 소크라테스는 풍기문란에 국가보안법 위반,청년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고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서고 사형언도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이 스파르타의 정치체제인 엘리트주의를 추구했기때문이었다. 이 당시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였고, 스파르타의 정치체제는 엘리트주의였는데,아테네는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계속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플라톤이 제시한 정치체제는 ‘철인정치’였다. 철인정치는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형태다.

• 소수에 의한 정치체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만약 소수의 권력자가 지혜롭고 뛰어난 까닭에 대중들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말이다.

• 다만 엘리트주의, 독재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소수에 의한 정치는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고대와 중세의 절대군주 아래서 백성들은 노예였으며, 근현대에 등장한 독재자들,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중국의 마오쩌둥,북한의 세습적 독재자들은 개인적 실책과 부패로 인해 민중을 폭력적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 독재와 민주주의 비교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체제는 무엇인가

• 현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개인에 의한 독재와 엘리트 정치는 실현될 수 없다. 이상적 개인에 의한 이상적 정치는 실현 불가능하다. 독재자나 민주주의자나 어쩔 수 없이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고, 이로써 필연적으로 소외되고 희생되는 집단이 생긴다. 모두를 만족시킬 이상적인 정치는 없다. 따라서 이상적인 독재자, 엘리트는 불필요하다.

-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결합되는가

• 현대 사회에서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은 거의 언제나 자본의 자유,시장의 자유를 의미한다.

• 자유민주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이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체제인 것을 말한다.

• 노동자가 독재하는 사회가 공산주의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다.

북한은 노동자에 의한 정치 형태도 아닐 뿐만 아니라, 90년 후반 ‘선군정치’라고 해서 사회의 핵심적 계층으로 군을 중시하는 정치체제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군이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등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총괄한다. 국가가 경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권위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니 통제경제의 파시즘 체제 정도로 이름 붙이는 것이 적절하겠다.

- 한국의 60~80년대 군부독재 시기는 자유주의적 독재국가라 할 수 있겠다. 이체제는 국가가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계획경제의 모습을 띤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군부독재기를 후기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볼 수는 없다. 군부정권의 시장 개입은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한적인 개입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를 추구한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시장 투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가를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다보니 사민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변절자로 비판받아왔다. 실제로 사민주의 사회에서는 보수적 정당과 진보적 정당이 공존한다. 다양한 정당들은 자유롭게 경쟁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선택받는다.

사민주의체제에서 시민들은 국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성장과 분배, 시장 자유와 정부 개입, 세금 축소와 복지 확대중 개인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된다. 부러운 사회다. 한국전쟁 이후 가려지고 은폐되어 자본주의 이외의 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사회다. 북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은 현재 성숙한 사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이상적으로 보이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에도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사민주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보다 상대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복지가 확대되는 대신 세금의 부담이 높을 것이다. 복지 확대는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세금 인상은 노동 의욕과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 경기를 침체시킬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평균적인 부유함은 사민주의 때문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환경과 역사적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측면에서의 부와 기술의 축적은 유럽 전역에 혜택을 미쳤고 또한 풍부한 자원과 유럽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과감한 복지정책이 가능했다.

- 민주주의의 형식적 급진성과 현실적 보수성 -

우리는 왜 보수화되어가는가

- 자유민주주의든 사회민주주의든, 민주주의체제는 ‘가능성’의 체제다. 가능성의 체제라는 말은 민주주의가 고정된 사회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한다.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는 내일의 사회 모습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잠재력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는 생각보다 변화하지 않는다.

- 이유는 단순하다. 대다수의 사람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쉽게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이익 추구에 대한 견해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까닭에 경제체제는 쉽게 변하기 어렵다.

• 어째서 한국사회는 재벌과 기업에 유리한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하고 있고, 보수 정권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한국사회의 보수성향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다.

첫 째, 역사적 문제가 있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경험이다. 둘 째, 교육의 문제가 있었다. 정규 교육이나 매체를 통한 교육이나 보수적 측면을 띠는 것이다. 정규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기득권이다. 기득권의 세계관이 교육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교육은 언론과 방송의 영역이 보수적인 매체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측면에서 보수성을 강하게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셋 째, 대중의 비합리성이 원인이다. 대중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무엇이고 어떤 사회·경제체제가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문제점이었던 중우정치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은 왜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가? 그것은 대중의 역사적 경험과 편향된 교육 때문이다. 다른 세계, 다른 체제에 대한 과장된 공포가 민중의 저변 의식에 뿌리 깊게 내재하게 된 까닭이다.

• 여기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체제’자체가 아니라 ‘체제 선택의 합리성’이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특정 권력의 의도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경제체제를 선택했다면,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을 비판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정보가 은폐되고 변형되어 대중들에게 주입된 채 대중들이 자신들의 현재 이익과 괴리된 체제를 선택한 것이라면 그 정보 은폐의 주체는 강력하게 비판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인 것은 특정한 경제체제가 아니라, 특정 경제체제가 선택되도록 의도적으로 작용하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 성향이 특정 권력층의 의도적 작용이었다고 해서 대중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교육과 매체를 이용한 권력층의 작용이 있었다고 해도, 대중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경제체제를 끝내 유지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대중에게 있다. 대중 스스로의 비합리성에 대한 책임은 대중 스스로가 져야 한다.